

# 美中 패권경쟁 핵심 반도체… “취약분야 지원 입법 필요”

국회미래연구원, 미래보고서 발표  
“경쟁력 키울 장기적 입법 추진해야  
시스템 반도체 육성 지원도 필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 국회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취약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16일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반도체’란 미래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정책 동향, 이에 따른 한국의 반도체 산업 영향과 과제 등을 짚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중강경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반도체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며 대(對)중 견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주요 우방국이 가진 기술적 우위의 유지·확대 추구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 〈반도체 지원법 예산〉

분야	예산
CHIPS for America Fund (상무부)	500억달러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	390억달러
-연구개발(R&D)	110억 달러
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 (국방부)	20억 달러
:국방 분야와 관련된 반도체 분야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분야의 반도체 제조 등)	
CHIPS for 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Fund (상무부, 국방부)	5억달러
:국제 정보통신기술 보안 및 반도체 공급망	
CHIPS for America Workforce and Education Fund	2억 달러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	
합계	527억달러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약 2800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반도체와 과학법’을 처리하고 미국 상무부는 일정 사양의 반도체 제품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보고서는 “사실상 첨단 반도체 제품의 중국 수출을 전면 중단시킴으로써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의도”라며 “중국의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 및 인공지능 분야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첨단 반도체 제품과 장비 생산의 대부분이 미국의 기술과 장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강경노선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기회와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정책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해외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기회요소로 봤다.

다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대(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손실이 우려되는 것과, 미국이 자국 내 제조 기반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 내 반도체 생산기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국회미래연구원

항목	세액공제율	비고
연구개발(R&D) 대기업	30~40%	
연구개발(R&D) 중견기업	30~40%	
연구개발(R&D) 중소기업	40~50%	
설비투자 대기업	8%	투자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4% 공제
설비투자 중견기업	8%	
설비투자 중소기업	1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에 적용.

또한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함에 따라 다른 반도체 선진국들도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며,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속에 있는 한국, 대만, 일본 기업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사업법’을 시행하고 대기업의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범위를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정부의 전략을 뒷받침 하기 위한 국회의 전향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및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사

항은 정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으나,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행정부의 전략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정치권이 광범위한 공감대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 강점이 있는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 장비, 설계, 패키징, 테스트 분야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中 작년 경제성장률 2.8%… 46년 만에 ‘최악’

##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제로코로나 정책에 발목  
60년 만에 인구 첫 감소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3%에 그쳤다. 당초 목표했던 5.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확산으로 충격이 컸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문화대혁명 당시인 1976년 -1.6%를 기록한 이후 46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다. 대규모 봉쇄와 격리로 대표됐던 ‘제로 코로나’가 결국은 중국 경제를 끌어내리고 말았다.

뚝 떨어진 성장률과 함께 그간 경제호황의 주역이었던 인구도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9%로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3%



중국 베이징에서 사람들이 시내 쇼핑거리를 걷고 있다.

/AP·뉴스시

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2.2%를 제외하면 반세기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경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했다. 작년 1분기 4.8%로 회

복세를 보이던 성장률은 상하이 등 대도시가 줄줄이 봉쇄된 2분기 0.4%까지 급락했으며, 3분기(3.9%)와 4분기(3%)도 회복 강도가 약했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해 작년 연간 소비는 -0.2%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다. 산업생산도 지난달 1.3% 증가해 전월(+2.2%)대비 둔화됐다. 고정자산투자만 지난해 연간 5.1% 성장했다. 지난달 도시 실업률은 5.5%,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2월 16.7%로 집계됐다.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이날 같이 발표된 인구 역시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했다.

국가통계국은 작년 중국의 인구가 14억1180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도 불어나는 인구가 노동력과 소비로 경제성장을 이끈 ‘인구 보너스’ 시대가 끝난 셈이다.

중국의 인구는 2016년부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당국이 부랴부랴 산아제한에서 지원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출생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1년 1000명당 7.52명이던 출생률은 2022년 6.77명으로 하락했다. 관

련 통계가 집계된 194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경제가 올해 얼마나 회복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증권일보 등에 따르면 31개 성·시 중 28개 자치구가 내놓은 2023년 성장률 목표치는 평균 6.0%다. 이를 감안하면 중앙 정부가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목표치로 지난해와 비슷한 5%대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국태군안증권 저우하우 선임연구원은 “리오프닝이 탄력을 받고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선다면 향후 소비와 투자 모두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설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을 이유로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5.4%로 올렸고, SC는 5.8%로 제시했다. 반면 블룸버그는 4.8%, 세계은행은 4.3%, UBS가 4.5% 등 4%대 보수적인 전망도 여전히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추가 우대금리 조건도 방해요소

》 1면 ‘대출금리 하락’서 계속

조건, 만기 30년 이하 맞춰야  
대출금리 4% 밑으로 내려가

올해 1월 2일 3.78%를 기록했던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 16일 3.37%로 마감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고정금리형 혼합금리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사실상 국고채 5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고정금리형 혼합금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도 거세지면서 대출금리는 더 하락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은행은 가산금리 조정 등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은행이 작년 순이자이익 등 규모에서 여력이 있기에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개별 은행들이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달

말 출시하는 특례보증자리론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례보증자리론의 기본금리는 4.75~5.05%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는 우대형인 4.65~4.95%의 금리가 적용되고,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인 차주는 일반형인 4.75~5.05%의 금리로 제공된다. 시중은행의 금리 하단이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례보증자리론 우대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4~5%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 추가 우대금리 조건도 방해요

소다.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위해선 ▲저소득청년(연소득 6000만원 이하) 0.01%p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연소득 6000만원 이하) 0.4%p ▲신혼가구(연소득 7000만원 이하) 0.2%p ▲미분양주택(연소득 8000만원 이하) 0.2%p 등이다. 조건 자체도 까다로운데,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기를 30년 이하로 잡아야 대출금리가 4% 밑으로 내려간다.

지난해 말 신청을 마감한 안심전환대출도 간간한 지원조건 때문에 흥행이 저조했다. 지난해 12월 종료된 안심전환대출은 공급규모 25조원 중 9조 4787억원(37.9%)을 공급했다. 안심전

환대출은 지원조건을 6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로 제한하다,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소득제한을 없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빠지면서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금리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일부만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례보증자리론 이용하다 갈아탈 수도 있겠지만, 향후 금리인하 시점이 올 것을 예상해 30년 동안 4~5%의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지 않는 차주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